

중국과 기존의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넘어서서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미래 지역평화와 공영 및 먹거리 전략과의 연계 구상 필요

전방위적 한-러 협력을 통해 북방 항로개발 및 북극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협력구도를 창출. 유라시아 내륙 물류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 방안 고민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2. 대(對)중국 정책

- 중국과 기존의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넘어서서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한-중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가치와 이익의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도모
  - 경제/사회/인문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서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 북핵 문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 및 공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
  - 서해 경계의 평화적 확정
-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증진.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지역적·전략적 협력을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미래 지역평화와 공영 및 먹거리 전략과의 연계 구상 필요

## 3. 대(對)일본 정책

- 1998년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한-일관계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실현해야 할 대일정책의 세 가지 과제는 첫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극복.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셋째, 미래로부터의 위협과 기회에 대응한 협력.
- 세 가지 대일 외교원칙 추진. 첫째, 과거사 극복과 국익 실현의 두 트랙 외교(Two Track Diplomacy). 역사·위안부 문제에서의 원칙주의와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사이에 균형점 추구. 둘째, 평화의 동반자 외교("Partnership for Peace" Diplomacy).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좁은 의미의 '국가안보'를 넘어 넓은 의미의 안보와 '평화구축'이라는 확대된 국익을 실현. 셋째, 글로벌 리더십 외교("Share the Global Leadership" Diplomacy).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 자유무역, 비핵평화라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러한 일본과 함께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제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노력.
- 식민지 유산의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위안부 문제. 민관과 국제사회가 다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 해법 추진
  -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이나 '폐기'라는 용어 대신 '개선'한다는 데 한일이 합의하고 합당한 방안 도출에 노력
  - 필요시, 국가 간 해결 추진하지 말고, 각자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김. 대신, 인류보편사적 문제로 국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국을 전쟁시 여성과 노약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운동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조치 준비

## 4. 대(對)러시아 정책

- 러시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는 접근 필요. 강화된 한-러 전략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와 공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
  - 한-러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제도화. 고위 지도자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 위해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 한-러 전략적 경제협력을 현실화하여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
  - 한-러 협력에 기초하여 환동해 경제권을 활성화하고, 항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한-러-일 3각 협력구도 구축을 통한 환동해 소지역 협력체제도 창출.
  - 한-러 협력에 기초하여 북-러 접경지대 및 자루비노항 개발을 구체화. 한-중-러 3각 협력을 통한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을 가속화.
  -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 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과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유도
- 전방위적 한-러 협력을 통해 북방 항로개발 및 북극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협력구도를 창출. 유라시아 내륙 물류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 방안 고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7. 05. 31 <제19호>

# CHINA WATCHING

## 역동하는 국제정세와 新정부 4강외교 정책방향 제안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 정책 제언

#### 1. 문재인 정부의 당면 정책 원칙은 '면밀관찰,' '전략점검,' '신중행동,' '국제공조' 유지가 되어야 함

- 현 국제정세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혼돈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에 들어섬. 각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대한민국도 북한도 북핵 정책 역시 재평가하는 단계에 들어 가 있음.
  - 한국은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로서 강대국의 움직임을 통해 그 방향을 읽고, 그들의 강점과 한계를 잘 읽어내고 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함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광개토대왕 증후군"을 보이면서, 추후 한반도 현상변경을 추구할 지도 모르는 우려를 안겨 줌.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북한은 일단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한국의 선의와는 상관없이 도발과 대립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남북관계는 진흙탕 속에서의 싸움이 될 것을 전제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6~7일 정상회담에서 각자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협상 국면으로 이끌어 낸다는 합의를 한 바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임
  - 이러한 정도의 합의와 압박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 계기를 잘 살려야 함.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안정화를 이룩한 이후 한국은 보다 창의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한 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임
  - 조금성과 성과 우선주의를 극복해야 함

#### 2. 결미(結美), 연중(聯中), 협일(協日), 교아(交俄), 화북(和北)의 전략을 제안함

- 미국은 여전히 우리 안보전략의 중심축임. 다만, 한미동맹이 대북한 동맹이며 중국을 겨냥한 지역 동맹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함. 대신, 다른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 강화. 트럼프가 야기한 불확실성과 갈등의 여지가 크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히 설파해야 함.
- 선입견을 넘어서서, 상상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 역시 절실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대북 정책에 대해 같이 연대하고 공모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미래 생존 공간 창출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일본과는 숙의하면서 불가피한 지엽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함. 한국과 일본은 세계 질서 변동이라는 새 도전에 협력하여 맞서야 하고, 유사한 운명을 맞이할 개연성도 다대.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6~7일 정상회담에서 각자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협상 국면으로 이끌어 낸다는 합의를 한 바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임

한미동맹이 대북한 동맹이며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함.

미-중 간에 유래 없는 대북공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창의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연대를 단단히 하면서 미래 생존전략을 구상해야 함

- 러시아와는 그간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 향후 북핵, 경제 개발, 지역 분업과 안정 등 문제에 있어 공조해야 할 사안이 많음. 상호 더 익숙하고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함.
- 미-중 간에 유래 없는 대북공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창의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연대를 단단히 하면서 미래 생존전략을 구상해야 함
  - 한국은 한·미·중이 다 같이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동북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3. 사드(THAAD) 문제는 출구 전략 신중 모색. 단 낙관은 금물.

- 새 정부 출범이후 한중 간 사드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트럼프-시진핑 간의 대북핵 전략 공조 및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에 대한 경시는 사드의 전략적 민감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음
  -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대감 고조. 중국은 이미 지난 3월 이후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비난을 삼가면서 분위기 조성
  - 시진핑 주석은 "전화" '문제로 촉발된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한국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옴. 동시에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한국 측이 제안한 개념인 " 구동화이: 求同和異 "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화해 제스처 전달
  -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이제 한국 측이 할 바를 해달라는 요청임
- 현 단계에서 중국도 사드 문제의 출구를 찾기 원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이 출구를 찾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긴요함.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간 기존 합의 준수
  - 박근혜 정부의 [1개 사드포대 배치, 대북한 용, 미군 부담의 원칙]이라는 한-미 간 기본합의와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 중국측에는 사드 운용이나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동맹'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보증, 이를 위해 한-미 간에 사전 양해와 합의 필요
  - 미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에는 긍정적 태도로 임하되,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대북 공격 역량 강화 축적에 활용
  - 중국과는 5월 G-20 정상회담, 8월 광복절 및 한중 수교 25주년 전후 정상회담 개최, 9월 UN총회 등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만나는 것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상호 신뢰구축이 필수적임

현 단계에서 중국도 사드 문제의 출구를 찾기 원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이 출구를 찾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긴요함.

## 내용 분석

### I. 동북아 국제정치 주요 변수들

#### 1. 미중 간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 트럼프 시기 미국 외교는 가치와 국익을 분리. 이데올로기나 명분보다는 실리주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힐러슨 국무장관은 중국 시진핑이 제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 수용
  - 트럼프는 오바마와는 달리 대전략 차원에서 대중 전략, 사드, 한미동맹 문제에 접근하지 않음. 트럼프 정부하에서 사드나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과소평가 될 개연성 다대.
  - 적어도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11월)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가져가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할 개연성 다대

#### 2. 중국의 보다 독립적인 대외정책 구상 진전

- 독립적 대외 전략 추진의 기반
  - 중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상정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제시. 중장기 구상으로 "일대일로 전략" 제시.
  - 중국이 독자전략을 강화하는 이면에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존재함. 중국은 자체 완결적인 독립

중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상정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제시. 중장기 구상으로 "일대일로 전략" 제시.

적 시장 경제의 운용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제도화(홍색공급망의 완성)를 추진 중이며, 현재 상당한 진전 이룩하여 기존 금융질서에 상응하는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 구성. 신산업은 중국이 주도하는 형상임.

- 보다 독립적인 미-중 관계로의 진화 과정
  - 미-중 양국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진전되기 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그만큼 대외 정책 역시 미국에 대해 독립적이며, 취약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중국은 아직 주요 역량 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공개적 갈등구조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여전히 상호 초국가적인 사안들과 얽혀있어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 전면적인 외교적·군사적 대항은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중국은 대규모 미중 경제협력(아마도 트럼프 일가와)의 조치를 통해 트럼프를 만족시키는 한편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미묘한 전략 운용 상황이 전개될 것임.
- 보다 주도적인 한반도 정책 추진 가능성
  - 중국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해법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상의 압박과 대화 병행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이 내용면에서 더 주도할 개연성 다대
  - 중국은 이미 2016년 표본겸치(標本兼治)의 해결 방안 제안.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 불용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천명
  - 2016년 3월 왕이 부장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 추진한다는 투 트랙(雙軌並行) 해법 제시
  - 2017년 3월 투 트랙(雙軌並行) 해법의 제 1단계로서 북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 한미연합군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雙暫停) 방안 제안
  - '핵동결을 현실적 목표로 하고 점진적인 비핵화 추진' 카드를 쓸 가능성. 핵동결 방안을 바탕으로 미국·중국·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음.

'핵동결을 현실적 목표로 하고 점진적인 비핵화 추진' 카드를 쓸 가능성. 핵동결 방안을 바탕으로 미국·중국·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음.

### 3. 미-중 간의 북핵관련 빅딜설

- 북핵 분야에서의 중국 역할을 강화하라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히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임
  - 북핵 문제가 양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
  - 미-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북핵 상황의 엄중성 인식.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합의. 다만, 북한이나 북한 정권의 타도를 정책의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
  - 미-중이 모두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결국은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신중한 정세분석과 정책이 필요
  - 현실적으로 미중이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미사일의 동결일 것임
- 지정학의 부활 추세. 미-중 간 남중국해 문제와 북핵 문제에서 이해관계를 교환하여 상호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 2017년 미국은 북핵문제는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안정화해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공조의 강화시 향후 미·중 간 제2의 카쓰라-테프트 밀약도 우려됨

미국은 북핵문제는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안정화해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보임

## II. 한국의 4강 외교 정책

### 1. 대(對)미국 정책 및 한미동맹

- 대미 관계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의 영역일 수 있음. 한미관계는 한국의 안보·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전략자산. 한미동맹은 강고한 한미관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점 재확인.
  -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대 변화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당당히 설명하고 설득.
  -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 추진 시 한국의 이해가 주변화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 유지
  - 전시작전권 임기내 환수를 위한 협상 추진하고, 이에 따른 한미 간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